



우크라이나 전쟁
2면

계속되는 금융 불안정
3면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
4면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 조사
13면

이란 시위
16면



중국 시진핑 체제는 사회주의 아니다

국가자본주의일 뿐

관련 기사 8~12면



우크라이나 전쟁, 통제 불능 국면으로 가는가?

김인식

폭격과 “소통 채널”의 가동,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2~23일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해 화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계속되는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의 40퍼센트가 파괴됐다. 그 결과 100만이 넘는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러시아의 폭격 직후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디텍은 발전량 부족으로 키예프(키이우)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국적인 순환 단전 실시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공격 목표물은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 시설이 파괴되면 전기는 물론 난방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의 중앙 난방 시스템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난방을 켜고 끈다. 개인이 조절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의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45퍼센트가 중앙난방 시스템에 연결돼 있다.

우크라이나의 난방 시즌은 보통 10월~3월이었다. 평소 같으면 지금이 중앙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올겨울 난방 시스템은 정부가 늦게 가동하고 일찍 끝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기온은 영상 10도 안팎이지만, 한겨울에는 영하 4~6도 이하로 떨어진다. 러시아가 열병합발전소를 계속 폭격하면 키예프 등 수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민들이 난방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다.

헤르손 대회전

전세가 분명 러시아 군대에 불리하지만, 최근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주민들을 무차별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등 나토는 미국산·독일산 첨단 대공 방어망 시스템 제공 등 우크라이나군의 무장을



격렬해지는 군사 작전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집중 폭격했다. 공격받은 키예프(키이우)의 한 에너지 시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들은 서방이 약속한 무기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쫓아 진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들에 더 많은 중무기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을이 끝나가면서, 교전이 더 격렬해지고 러시아는 더 많은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측 군 참모들이 작전을 수립할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이 한겨울에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계 장비들(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원조하고 있다. 미국제 대공 방어망 시스템과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시스템 하이마스 같은 무기도 지원하고 있다.

언론들은 헤르손 대회전(大會戰)이 임박한 남부 전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군수 물자를 헤르손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과 드네프르강(드니프로강) 독을 연결하는 바지선 다리를 나토가 제공한 무기로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다.

그 다리는 러시아군이 물자와 증강 병력을 수송하는 데 이용하는 다리이자 민간인들도 헤르손을 탈출하려면 건너야 하는 교량이다.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최근 교량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죽고 13명이 부상당했다.

헤르손 대회전을 앞두고 분석가들이 다양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겨울 내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시점

그래서 전쟁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 작전이 격렬해지고 있다. 헤르손에서는 주민 대피가 시작됐다.

심지어 나토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직접 교전하는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러시아군이 최근 겪은 좌절은 크렘린궁의 강경파들을 자극했고,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태세가 돼 있음을 거듭 경고했다. 러시아군은 10월 26일부터 핵전쟁 훈련인 ‘그롬’(우레)을 시작했다.

바이든도 푸틴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양측이 최근 급히 “소통 채널”을 가동시킨 까닭이다.

10월 21일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전화 통화를 했다. “공식” 채널을 통한 통화였다. 지난 5월 14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양측 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뒤이어 쇼이구는 영국·프랑스·튀르키예 국방장관들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한 뒤, 다시 오스틴과 통화를 했다.

이때 쇼이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더티 밤 사용 등 핵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더티 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가득 채운 무기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으스스한 상황이다. 10월 7일 바이든은 다소 걱정스럽게 이렇게 자문했다.

“우리는 푸틴의 출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체면과 러시아 내 상당한 권력을 모두 잃지 않는 알맞은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푸틴과 대화할 의향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푸틴도 마찬가지이다. 젤렌스키는 10월 4일 푸틴과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푸틴과 바이든의 손에 세계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 아니라 나머지 세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파멸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본지 독자들은 평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생계비 위기 문제를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철군하라!

미국과 나토는 개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지원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도심 집회와 행진

11월 26일(토)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종각역 4번 출구)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강동훈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정을 빨리 잠재우지 못하면 자칫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1997년 'IMF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 유승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IMF 때와 비슷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뒤에도 금융 불안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5대 대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7~8퍼센트대로 치솟았어도 채권 발행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인천도시공사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는 공기업들도 채권 발행 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산업은행과 시중 은행들,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상대적으로



정부가 휴일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IMF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50조 원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회사채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이 기관들도 지원 자금을 마련하려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자금 쏠림

그러다 보니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산업은행이나 시중 은행들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이나 다른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 증권사들도 1조 원을 거두어 중소형 증권회사들의 PF 관련 채권을 매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기로는 했지만 제 코가 석 자인 대형 증권사들은 '경쟁 회사 빛까지 떠안아

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이 나서서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고 돈을 죄고 있는 한국은행은 추가 자금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지만, 대신 국채를 그만큼 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나 부동산 PF 분야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는 없을 듯하다.

한국은행은 자신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면 한국의 금융 불안정을 시인하는 게 돼 버려 오히려 외환위기를 부를까 봐 두려워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시장에 유동성(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외국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도 외환위기 위험이 커지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도 채권 시장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는 일

이 있었다.

사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50조 원은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이스(NICE) 신용평가의 조사를 보면, 증권사와 건설사가 올해 연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PF 관련 부채만 해도 32조 3908억 원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57조 3759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등 PF 관련 부채가 90조 원에 육박한다.

금융연구원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PF와 부동산 펀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모가 75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중 202조 원가량은 부실 위험이 높다고 한다.

최근까지 이어진 저금리 덕분에 기업이 진 부채만큼 갚아야 하는 부채도 크게 늘었다.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532조 51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현재의 위기는 저금리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생겨난 부채의 지뢰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건설사부터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위기가 전염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하다. 금융기관들을 동원해 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건 그것대로 외환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수출 감소 등 실물경제 타격, 위안화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곳곳에 지뢰가 널려 있다.

대출 금리 제한하고 부채 탕감하라!

한편, 금리가 치솟고 금융회사들도 자금을 마련하느라 급급해지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서를 보면, 지난해 말 주택을 보유한 1245만 1000가구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는 103만 가구(8.3퍼센트)나 되는 것으

로 추산됐다. 하우스 푸어 가구는 은행 빚을 못 갚아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가 2.5퍼센트 포인트나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우스 푸어의 숫자는 훨씬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백만 명이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집을 잃을 위험이 커진 것이다.

다른 한편, 저축은행·카드사 등이 자금 경색으로 고통받으면서 서민 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수십만 원의 급전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도 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 대출 확대, 대출 금리 제한과 부채 탕감 같은 요구를 내놓고 생계비 위기와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는 광범한 대중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김문성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 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특히 야당에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 연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수사한다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국회 방문 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동하고 독재자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그 전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현직 대통령은 노태우와 박근혜뿐이었다.

정부·여당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10월 26일 경찰청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대폭 개악하는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안을 발표했다.

복합 위기로 인한 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이런 발걸음을 위한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검찰 간부 출신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내 알력 끝에 갑자기 사임한 것은 조그마한 징후일 것이다.

8억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우파 결집과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야당(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시정 연설 불참이 30여년 헌정사의 관행 파괴라던 윤석열은 국회 연설 후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노동조합까지 포함)을 탄압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제1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는 2003년이 유일했다. 재벌이 주류 양당 모두에 돈을 제공하니 한쪽만 처벌하기 힘들고, 그런 이유로 대선 자금 수사는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는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서 비롯했다. 우파는 천문학적 투기 이익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고 공격해 왔다. 그러나 수천억 원 수익의 대가라며 검찰이 요란하게 꺼내든 이재명 대선 자금 액수는 현재 8억 원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고한 대선 비용은 각각 408억 원, 438억 원이었다.)

게다가 법조계와 국민의힘측 인사들도(“50억 클럽” 등)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수사·재판은 별로 진척이 없다. 돈이 오갔든 아니든, 검찰 수사의 목적 자체가 정적 제거를 위한 것임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는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를 위한 국정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등 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 한다. 윤석열이 ‘약자 복지’ 예산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예산안은 복지를 대폭 삭감한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은 25일 국회 연금 ‘개혁’특위도 출범시켰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른 자금 경색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다급히 50조 원의 시장 공급을 약속하고 강원도지사 김진태도 채권 보증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꿔야 했음에도 말이다.

이 조처는 돈이 너무 풀려서 금리를 계

속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총돌의 강도를 완화한답시고 기업과 은행들에게는 돈을 풀면서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돈줄은 죄면, 대중의 불만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전기·가스 요금 동결 약속 폐기, 공정염원 배신, 한·미·일 군사 공조 일방적 강화, 우익 본색 드러내기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게서 중도층과 청년층이 등을 돌렸다.

윤석열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최근 원성을 사고 있는 카카오·SPC를 비난했지만, 말뿐임을 다들 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사실 쪼들매고 있다. 그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계비 위기로 정치 양극화가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이재명을 정조준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한편, 거리에서도 반윤석열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10월 22일(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주당에 친화적인 사회운동가들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

다. 비슷한 시간대에 열린 윤석열 지지 집회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정부의 퇴진을 주장한 집회인데도 수만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반감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국민의힘 vs 민주당’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운동은 온건 진보 포퓰리즘 정서가 유력하고 그 때문에 급진성에 한계가 있다.

▶ 5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경제의 혼란은 브렉시트 때문인가?

영국 정치권에서 벌어진 부조리하고 파괴적인 소동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비롯한 것일까?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때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수당이 처한 곤경을 가리키며 역시 자기가 옳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1990년 11월 마거릿 대처가 총리직에서 쫓겨난 이래 보수당은 언제나 유럽 통합에 대한 태도를 놓고 첨예하게 분열했다.

대처의 후임자인 존 메이저는 1992년 파운드화가 유럽 환을 메커니즘에서 밀려난 후 소수의 보수당 우파 평의원들에게 계속 발목을 잡히다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이런 패턴은 그 후에도 되풀이됐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보수당 우파들을 입 다물게 할 요량으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캐머런의 도박은 화려하게 실패했고, 캐머런은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후임자 테리사 메이의 정부는 강경한 방식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라는(하드 브렉시트) 요구 때문에 갈수록 마비됐다.

다음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은 유럽연구그룹[ERG, 유럽연합 탈퇴 지지 보수당 의원들의 모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캐머런이 편 긴축 정책을 비판했다. 덕분에 노동당의 아성이었던 북잉글랜드의 “붉은 벽” 선거구들에서 지지를 얻어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존슨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릴 우파가 따로 필요 없었다. 그 일을 제 손으로 해내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보수당이 존슨의 후임자를 정하려고 술한 파벌들로 쪼개져 쟁투에 휩싸인 데에 리즈 트러스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2016년에는 유럽연합 잔류파였다가 기회주의적으로 ERG 진영에 합류한 자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러스와 재무장관 퀴지 콰텅이 고안한 재앙적인 감세 정책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것은 많은 우파가 지지한 브렉시트 프로젝트의 결실로서, ‘주권’에 대한 신념을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미래상과 연결한 것이었다. 우파들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규제 지옥에서 벗어난다면 작은 정부, 낮은 세금, 느슨한 규제가 특징인 경제를 통해 영국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트러스의 감세 정책에 금융시장이 요동친 이유는 브렉시트와 그다지 관련이 없다. 올해 초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세계 경제 환경을 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이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계급 전쟁이 선진국 세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로 변화시켰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만큼 실업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지 않았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격화 등이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 몫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계급 전쟁이 선진국 세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의 부작용 하나는 팬데믹이 낳은 경제적 혼란을 헤쳐 나가려고 돈을 빌린 정부들이 더 비싼 이자를 치르게 됐다는 것이다.

“멍청이 프리미엄”

영국의 특수한 문제는, 트러스와 콰텅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 그래도 부채가 비싸지는 마당에 정부가 450억 파운드(약 74조 원)를 더 빌려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이 국제(영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 비싸졌다. 트러스와 콰텅 덕분에 〈텔레그래프〉지가 말한 “멍청이 프리미엄”이 국제 수익률에 더해진 것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저지른 멍청한 짓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알파빌” 칼럼의 계산에 따르면, 이 “멍청이 프리미엄”은 전체 국제 이자의 4분의 1에 달한다. 5년 동안 이 할증금을 내는 데 168억 파운드(약 27조 60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출이 추가로 쓰일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가 24일에 발표할[캘리니코스의 이 글은 그 전에 쓰여졌다 — 역자] “재정 계획”의 내용은, 300억 파운드(약 4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지출 삭감으로 금융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 가일층의 긴축은 인플레이션이 낳은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단적인 우파 경제학자 엠브로즈 에번스-프리처드가 〈텔레그래프〉지에서 지적했듯이, “경기후퇴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허리띠를 세게 졸라매는” 정책은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긴축에 대한 [지배계급의] 지지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그들의] 대립을 초월하는 것을 보라. 예컨대 헌트는 유럽연합 잔류파였다.

이 재앙적인 경제 정책 전환은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리시 수낙이 [10월 25일] 총리가 되면서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산산조각 난 보수당은 이제 더 큰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호 / 번역 이원웅

▶ 4면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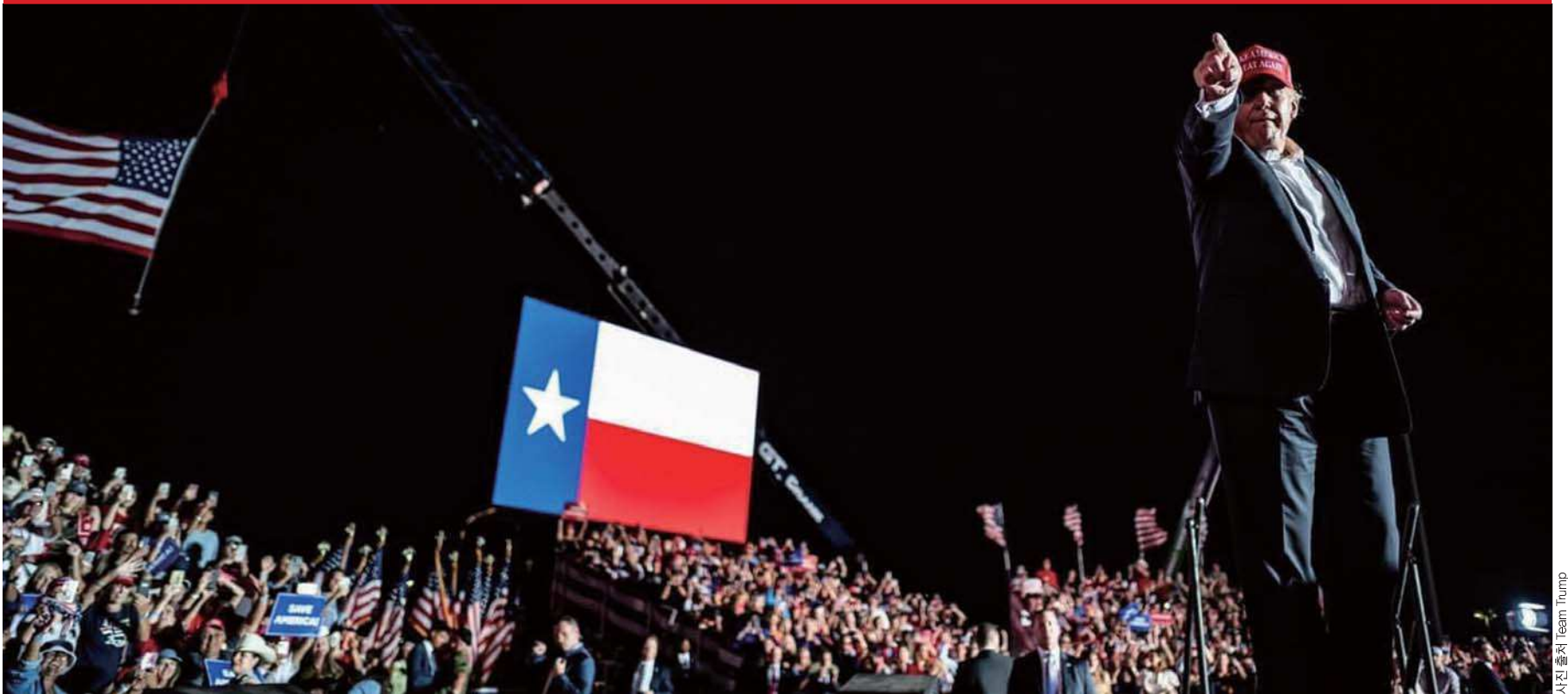
하지만 좌파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양극화 구도는 지난 몇 년간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노동자 투쟁을 보편화(정치화)시키지 않아 투쟁의 성격이 경제주의적·부문주의적이 돼 정치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과 주로 관계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이 민주당 진보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본지 독자들은 커져가는 반윤석열 정서와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들, 제국주의간 전쟁 반대 정서를 서로 연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단순한 민주당 응원부대 썰로 봐선 안 된다



10월 22일 텍사스주(州)에서 트럼프 파가 연 '미국을 구하라' 집회 무대에 오른 트럼프

트럼프 파의 약진이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 어쩌다 이런 일이!

바이든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약진이 전망된다.

미국 선거 전문 인터넷 언론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최대 247석까지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총 35석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 구도는 그보다 박빙이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맹추격 중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도 극우 트럼프 파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공화당 상원 후보 중 24명, 하원 후보 중 151명이 트럼프의 지지 선언을 받은 트럼프 파인데, 이들 대다수는 당선권에 있다.

생계비 위기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심각한 위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자아낸 환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의 2022년 1·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도시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8퍼센트대다.

인플레이션과 생활고 문제는 현재 미국 대중에게 핵심 사안이다. 하버드대학교 미국정치연구센터의 10월 12~13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인플레이션(37퍼센트), 경제와 일자리(29퍼센트), 그리고 이와 연관해 제기

되는 이민 문제(23퍼센트)다.

위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노동자 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연준(연방준비제도가 사회)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그런 정책이 대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9월 2일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가계와 기업이 감수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는 가뜰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더 키울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표방했지만, 바이든 정부하에서 지니계수는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0.494까지 높아졌다(2021년).

바이든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대부분 기업 지원에 쓰였고, 서민 지원과 부채 탕감액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했다.

틈

트럼프 파가 장악한 공화당은 바로 이 환멸을 파고들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백지 수표를 끊어 주면서 미국인들은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서민의 친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화당 역시 알량한 서민 지원조차 삭감하려 갖은 애를 써 왔다. 예컨대 바이든이 불충분하기 짝이 없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을 내놓았을 때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사회주의적"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관련 기사 본지 432호 '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 발표: 보통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너무 작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끊어 준다"고 비난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의회에서 그 백지 수표(대규모 무기·군비 지원)에 번번이 찬성 투표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것은 복지와 서민 구제가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선동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으니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입국을 어렵게 해야 한다며 말이다.

이런 반이민 선동은 극우를 더욱 고무하고 있다. 텍사스주 등 미국 남부 주들에서 반이민 선동에 열심인 트럼프 파 공화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바로 그 주들에서 극우 단체들이 이주민·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폭력을 크게 늘리며 세를 키우고 있다.

이 문제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주민 통제 정책과 악명 높은 탄압 기구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온전히 보존시켜 환멸을 자아냈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 자신이 여러 영

역에서 자아낸 환멸이 극우의 성장 동력이 됐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와 극우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선거 성적을 내려한다. 그래서 2021년 1월 6일 극우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관련 의회 청문회를 크게 부각한다.

하지만 그 청문회는 극우를 저지하는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도리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게 전국적 유명세를 부여하고 그들이 기성 권력층의 대항 세력을 자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청문회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인들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하버드대학교 미국정치연구센터 조사).

무엇보다도 바이든과 민주당의 극우 공포 부추기기는, 자신들이 극우가 부상하는 토양인 중첩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계급 등 서민층을 구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가리지 못한다.

의존

하지만 버니 샌더스와 민주사회주의 운동(DSA)은 트럼프·극우를 저지하려면 민주당과 협조해야 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 공조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금 민주당이 서민 구제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간 바이든 정부가 꾀죄

▶ 7면으로 이어짐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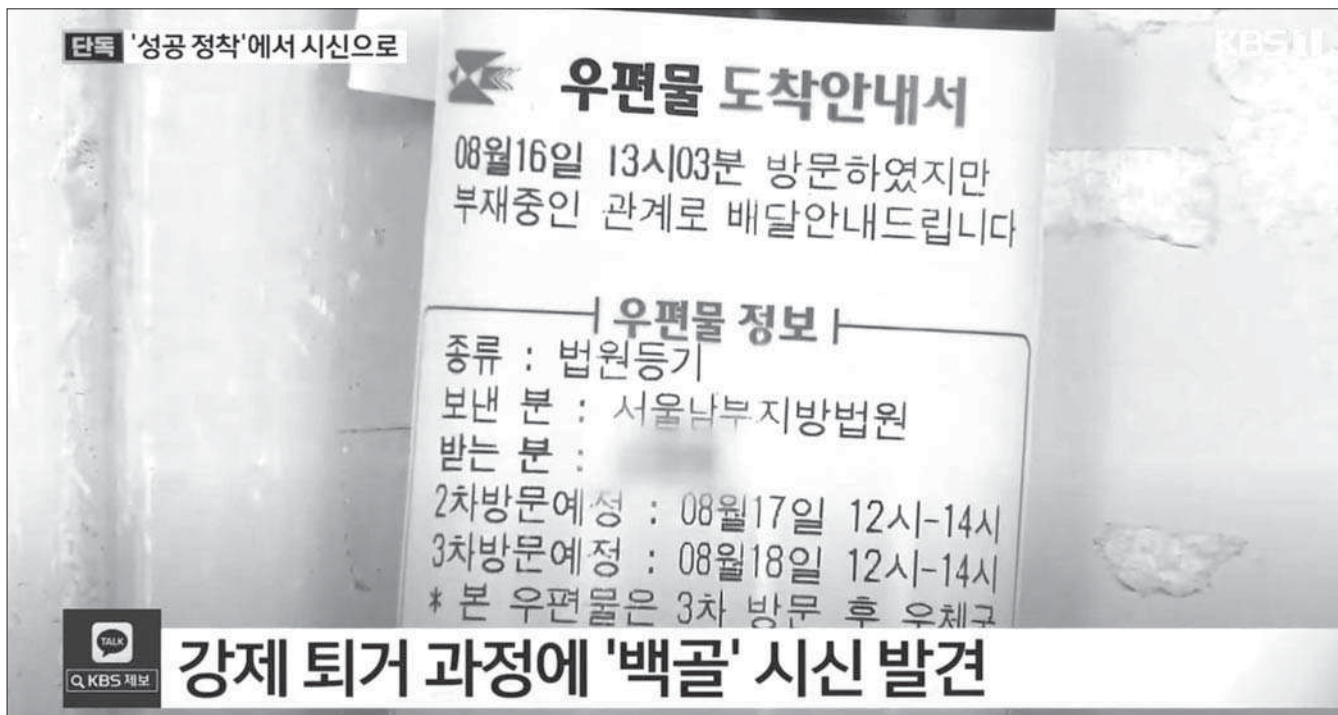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상담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이 일에 더는 희망이 없어 보여서 영어나 외국어 등 다른 공부를 해 보려 한다”고 토로한 뒤 사직서를 냈다. 이후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김 씨의 지인은 “전문상담사가 계약직이라 처우가 좋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폭언이나 성희롱성 발언이 빈번해 힘들어 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탈북민 자립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남북하나재단조차 탈북민을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고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퇴직 후 김 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던 듯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시까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 2021년 12월까지 밀린 금액은 임차료 151여만 원, 관리비 90여만 원이었다. 그리고 2021년 7월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미뤄 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도 경제적 처지가 악화되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김 씨가 여러 차례 요금을 체납하자 정부 기관들이 김 씨를 ‘위기가구’로 선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김 씨를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경찰



성공 정착 사례도 이렇진대 고독사한 탈북민의 집 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나 공무원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게 하거나, 통신사에서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그러나 정부가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며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안이 탈북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탈북민은 남한 정착 후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 돼 감시를 받고,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 조치가 연장된다. 김 씨는 2019년 보호 조치 연장을 거절했다고 한다.

전반적인 복지가 부족한 것이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게 제때 충분한 복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축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복지를 더 축소하려고 한다.

한편, 탈북민 대상 전문상담사로 일했던 김 씨가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 사망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탈북민이 남한에서 겪는 차별과 냉대가 김 씨를 좌절케 했을 수 있다.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를 보면,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6시간, 월 평균 임금은 228만 원이었다. 한국 전체 평균보다 6시간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46만 원 적은 것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6.7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4.5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7.5퍼센트로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2020년 통일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퍼센트로 한국 전체 3.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이나 열등한 존재로 보는 편견도 적지 않다. 이는 남한에 가족이나 지인이 별로 없는 탈북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탈북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런 편견을 조장한다. 탈북민이 남한에 오면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

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한 사례다.

위선과 침묵

탈북어민 강제복송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탈북민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 탈북민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씨가 사망한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유리할 게 없다고 볼 것이다.

주류 정당들이 탈북민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이런 비극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우파가 탈북민을 위선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열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탈북민 문제가 우파 전유 쟁점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정부를 향해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임준형

▶ 6면에서 이어짐

죄한 구제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을 동안 줄곧 민주당에 협조해 왔다. 기층의 대중 행동에 대한 호소는 거의 하지 않았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에 속한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에 계속 찬성 투표했다.

10월 24일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이 속한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 모임은 바이든이 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금은 휴전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면서 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비판하고 위기에서 노동계급 등 서민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좌파적 목소리가 사라진 탓

에, 극우가 서민의 친구를 자처하고 반전(反戰)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극우 부상을 저지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의회 내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 운동이 확대·심화될 때 가능하다.

그런 운동의 가능성은 있다.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맞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같은 대규모 대중 운동이 벌어졌다. 지금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여러 주 정부가 시도하는 낙태권 개악에 맞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운동이 얼마 전 공화당 강세 주인 캔자스주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층의 운동들을 연결·심화시키고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좌파적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준호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10월 2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다섯 번째 시간이었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 국가의 세 핵심 직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직, 내년 3월 확정될 국가주석직, 인민해방군 총지휘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상임위원장직입니다.

시진핑의 3연임 확정을 두고 흔히들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구축됐다고 논평합니다. 심지어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 체제가 확립됐다고 시진핑을 진시황제에 비유해 '시황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논평을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의 임기는 2연임이 관례였었다. 하지만 이게 무너졌다. 그리고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이 사라졌다. 게다가 67세 유임, 68세 퇴임이라는 연령 제한, 이른바 '7상8하'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공산당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시진핑의 친위 세력인 시자전(習家軍)으로 채웠다. 파벌 안배를 무시하고 그랬다.' 뭐, 대강 이런 논거들입니다.

물론 시진핑의 3연임이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관료의 국내 계급 지배나 대외 정책 같은 지배 전략이 바뀌었다고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시진핑 3연임은 그저 중국 지배 관료의 내부 관례를 약간 변경했을 뿐이며 그들 간의 상호 암투와 견제는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3연임을 두고 시황제 운운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렇게 사태를 과장되게 보면 서방이 더 낫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 확정은 중국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기엔커녕 오히려 중국 관료가 1989년 톈안먼 항쟁 같은 사건의 재연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했지만, 그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일입니다.

지금 중국 관료는 제2의 톈안먼 항쟁이 일어날까 봐 대중의 불만 표현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직전인 10월 13일 베이징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봉쇄와 통제가 아닌 자유," "시진핑은 매국노이자 독재자" 등의 문구가 적힌 배너를 건 기습 시위였습니다.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하이톈구의 쓰통차오 육교 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배너에 적힌 문구가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공중화장실 낙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 3연임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즉 중국 지배계급이 시진핑에게 3연임을 하도록 힘을 실어

준 것은, 지배 관료의 막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경제와 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시진핑 체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도움 됩니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직에 취임했던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해는 중국 안팎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먼저 대외적 측면을 보면, 특히 2008년 세계경제 공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당시에 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

일의 메르켈 당시 총리는 중국이 위기에 빠진 유럽의 백기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중국 모델이 부상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외적 변화도 있었는데, 2011년 미국 정부가 유명한 'pivot to Asia', 곧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본격 천명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생산과 교역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아시아에 제국주의적 개입을 늘리겠다는 미국 지배계급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입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이 제시한 계획이 이른바 '쌍백운동(雙百運動)'입니다. 쌍백운동은 2021년 '소강사회', 곧 모든 인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고 2049년에는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49년은 신중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중국몽과 쌍백운동이라는 비전에 따라 2013년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



지난여름 중국군이 발인 대만 봉쇄 훈련

路)’를 제시했습니다. 일대일로는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의 경제력에 기반해 전 세계에 중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은 이런 제국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두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중국제조2025 계획에서 잘 드러나듯이, 첨단 산업 분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저항을 억압하는 일입니다.

먼저 첨단 산업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기간 내내 첨단 산업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엔진 제조 기술력이 미국과 일본보다 뒤쳐졌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의 핵심국이 됐습니다.

다른 첨단 산업 육성 사례로 5G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화웨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가만있을 리 없습니다. 무역분쟁을 벌이고 중국의 초일류 기업에 제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재무이사 명완저우를 기소했고, 바이든은 한국·대만·일본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chip4)’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고, 애플에게는 부품 생산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비록 정치·군사적으로는 대립하지만 두 나라의 자본들은 상대국에 투자하는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들며 이런 경제적 통합 때문에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방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견해일 뿐입니다. 애플 등 제가 방금 언급한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두 나라의 자본들은 자국 국가와 한편이 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사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진핑의 저항 억압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기 두 해 전인 2010년 중국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두 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애플의 중국 부품 생산



2018년 집회 중인 자스커지 노동자와 지지자들

업체인 폭스콘에서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자살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은 광둥성 포산에 있는 혼다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 파업으로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쟁취했습니다.

두 사례의 주인공들은 모두 새 세대 농민공들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발전하자 농촌 호구를 지닌 농민공들이 도시로 와, 저임금을 받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그 효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노동자 단체행동 건수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시진핑은 집단적 투쟁의 가능성을 점차 깨닫고 있는 2억 8000여 명의 농민공들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경 그는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인 선전과 광

저우 일대의 노동단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체포했습니다. 2018년 자스커지의 노동조합 결성 노동자와 이를 지지한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진핑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 농민공들은 제조업, 플랫폼, 소매금융, 운송과 배달 등의 분야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 때문에 시진핑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고 정부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며 매우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위기

이런 권위주의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이력저력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 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대한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관료가 높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 하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얻으려면 8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여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인 5.5퍼센트조차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의 루펑(盧鋒) 교수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이 6.1퍼센트이고, 청년 실업률은 18.2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미국의 3.6퍼센트보다도 높고, 청년 실업률은 유럽의 13.9퍼센트나 미국 8.6퍼센트보다 훨씬

싼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집권 내내 경제 성장이 둔화해 왔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중국 경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한 건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 붐이었습니다. 이런 성장의 결과는 막대한 부채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 류귀창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가 272퍼센트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총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를 합한 것).

시진핑 정부는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를 줄이려고 애썼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최근의 시도는 부동산 개발로 인한 건설사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부동산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광둥성 정부는 건설사 대출 규제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소위 '질서 있는 파산'을 통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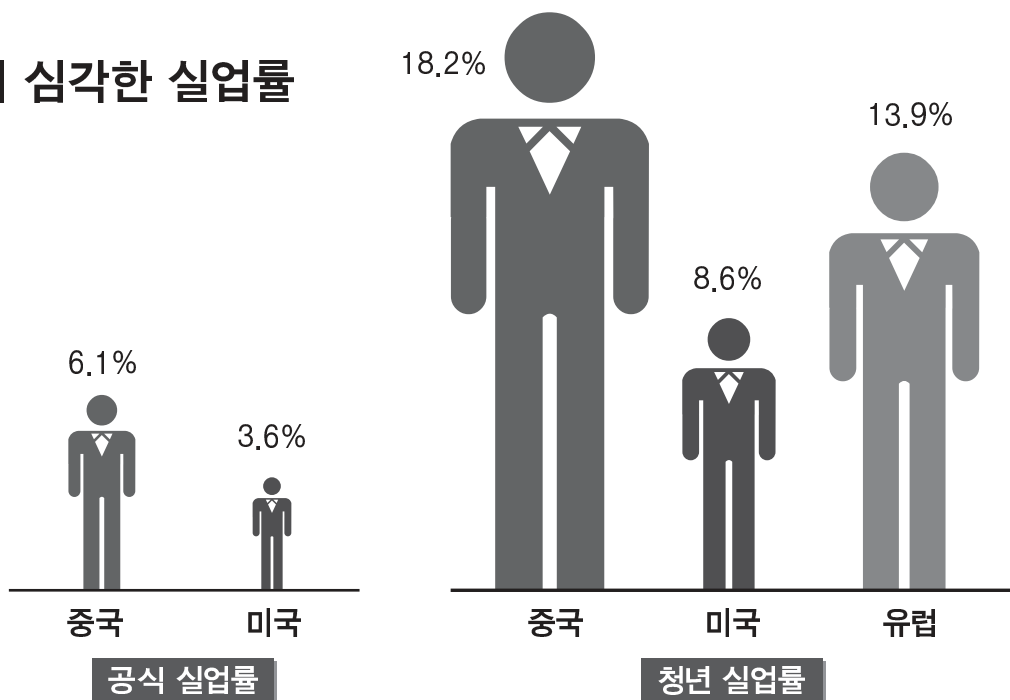
중국인들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러면서 세계경제로부터 받는 압력과 긴장도 고스란히 안게 됐습니다. 가령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자, 중국에 투자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부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근래에 국진민퇴(國進民退)를 강조해 왔습니다.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이 후퇴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보다는 국가 자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중국 경제가 휘둘리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에 맞서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기치는 '공동부유'입니다. '다 같이 잘살

중국의 심각한 실업률



10월 13일 베이징의 한 육교에 기습적으로 걸린 반시진핑 현수막

자'는 말입니다.

국내의 일부 좌파는 공동부유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부유의 진정한 목적은 인민대중의 복리가 아니라,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부유는 또한 최근 급성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유경제, 핀테크 기업들이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색 규제'로 불리는 이런 민간기업 통제는 중국 관료가 앞으로 더 첨예해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시진핑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의 민주 세력을 제압하는 데 일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중국 관료는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기업들을 손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공동부유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맺음말

시진핑 체제는 해외에서는 미국과 제국주의 경쟁을 치러야 하고 국내에서는 부국강병 국가를 여전히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료는 노동자와 농민을 효과적으로 착취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관료 지배계급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의 3연임을 지지해 준 지배관료 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세계적인 기업주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관측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 위주의 경제 정책은 그에 따른 막대한 부채 누적과, 투자에 비해 계속 낮아지는 GDP 성장률로 이미 그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은 비극적 실수가 될 것이다.”

사실 좌파인 제가 봐도 시진핑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좌파들은 시진핑의 공동부유나 홍

색규제를 진보적이라고 보고, 국유기업을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봅니다.

반면 어떤 좌파는 3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나 홍콩 민주화에 대한 탄압 또는 대만 무력 점령 의지를 이유로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보다 더 못한 사회 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본질 면에서 서방 사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라고 보면 서방이 더 낫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를 우선 반대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 중국 제국주의를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on-china>

시진핑의 ‘공동부유’·‘국진민퇴’는 사회주의적 노선인가?

정선영

최근 3연임을 확정된 시진핑은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다. 공동부유는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인데, 앞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자)을 주창했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서구는 자유 민주주의,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 구도로 프레임을 짜려는 것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은 ‘공동부유’, 미국은 ‘쇠락하는 무질서한 신자유주의’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진민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진민퇴는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간 기업은 후퇴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것이 개혁개방 이전인 전면적인 국가자본주의로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여전히 외국자본 유치 등을 말하고, 민간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와 일부 기업의 국유화와 같은 국가 자본주의적 조처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산업을 양대 국유 기업 체제로 재편했다. 희토류는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또 시진핑은 민간 기업 통제도 강화한 바 있다(이른바 ‘홍색 규제’). 2020년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가 이후 퇴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알리바바를 반독점법으로 규제해 3조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공동부유를 두고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조처라고 한다. 한국의 언론들도 시진핑 3기의 공동부유와 국진민퇴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보도한다.(물론 성장률 둔화와 부채 위기는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공동



중국은 세계에서 역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전체 인구의 40퍼센트는 월 1000위안(20만 원)으로 살아간다

부유 같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진보적?

좌파 일각에서도 공동부유와 국진민퇴와 같은 정책을 진보적이라고 보는 경향은 있다. <민플러스>의 경우,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고 미·중 갈등에서 중국 정부를 지지해 왔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시진핑이 중국을 다시 사회주의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도 공동부유를 “자본주의 영역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조처라며 진보적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공동부유, 국진민퇴 같은 정책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먼저 권력자들이 하는 말과 실제 체제의 성격을 구분해 봐야 한다. 전두환의 정당은 민주정의당이었지만 그는 민주, 정의와 아무 관련이 없었듯 말이다.

오늘날 중국의 사회 불평등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보다 더 심하다. 시진핑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부유를 표방했지만 약속했던 부동산세, 상속세 도입 등과

같은 매우 온건한 개혁조치 실행하지 않았다. 되레 경기를 부양하려고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강화했다.

중국 권력자들이 말로만 공동부유를 내거는 것은 불평등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뿐이다.

국진민퇴를 통해 민간 자본을 규제하고 국가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인 것도 아니다. 국가 통제 강화가 곧 사회주의라고 본다면, 산업의 대부분을 국가가 통제했던 박정희 시절이야말로 사회주의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체제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국가 소유냐 민간 소유냐 하는 소유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동학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중국의 국영 기업도 민간 기업과 다를 바 없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 중국에서 노동자 파업이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에서 별 다를 바 없이 벌어졌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중국 지배 관료들은 개혁개방 이전부터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으로 자본들 간의 경쟁과 노동자 착취를 꼽았는데, 중국의 국가

부문도 이런 경쟁적 착취의 동학이 고스란히 작동해 온 것이다. 따라서 중국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봐야 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

현재 미·중 갈등처럼 제국주의적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다. 각국이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술 패권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 설비 육성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배계급은 이를 위한 재원을 결국 노동자 착취를 강화해 마련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들어 노동자·학생 투쟁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또 앞서 말한 홍색 규제도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임과 함께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견을 억누르며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 있다.

중국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은 시진핑이 아니라 그에 맞선 노동자와 학생, 소수민족 등 차별받는 사람들의 투쟁 속에서 나올 것이다.

중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처할 것인가?

지난해 9월 중국 2위 건설 기업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45.4퍼센트 줄어 반토막 났다.

이것이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공사가 중단돼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커다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집 하나 마련하려던 꿈이 물거품이 되고, 큰돈을 떼먹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도시 100여 곳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기업 부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45퍼센트가 기업을 운영해도 빚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20퍼센트는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권 판매 수익에 의존해 왔고, 이는 2020년 기준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약 46퍼센트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누적 적자는 7조 위안으로 GDP 대비 6퍼센트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위기로 전이

물론 중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9.5퍼센트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숨겨진 부채 때문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유자기구의 부채 규모는 GDP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 부채가 부실화되고 있어 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기댄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 준다. 중국은 2000년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실물 경제의 성장 추세는 점차 둔화해 왔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해 왔다. 그래서 1997년 중국 GDP의 10퍼센트가 되지 않던 부동산 부문은 근래에 25퍼센트가량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함께 중국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3퍼센트 안팎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목표치인 5.5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부동산 침체로 재정 위기가 심화하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여

력도 줄어들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기 부양과 부채 축소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왔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기업 규제를 추진했고 그 여파로 2021년 헝다가 파산했는데, 이제는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예외일까?

부채 위기가 심각하지만 중국은 (서방과 달리) 금융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 시스템을 4대 국영은행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정부가 핵심적인 금융 부분을 지배하고 있고, 부채는 주로 국내에서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력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부채를 무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부채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평가기관 피치의 애널리스트 왕잉은 “중국 당국이 모든 기업을 살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파산’을 추구하겠지만, 정부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채가 숨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중국 지배자들이 국제 금융시

장의 압력 속에서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있지만 이 때문에 중국에서 외화가 유출되고, 달러화 외채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기업들의 부채를 떠안을수록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줄어들고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던 폴란드에서는 외채 위기가 벌어졌다. 당시 폴란드 정부는 물가를 인상해 재원을 조달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연대노조의 투쟁이 거대하게 벌어져 정권을 뒤흔들었다. 옛 소련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양보를 할 여력이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부채 위기의 부담을 결국 노동계급 대중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들의 ‘질서 있는 파산’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평생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듯이 말이다. 부채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시도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중요하다.

정선영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주택이 200만 채에 달한다

마이크 데이비스 덕분에 우리는 자본주의가 낳는 각종 재앙을 분명히 꿰뚫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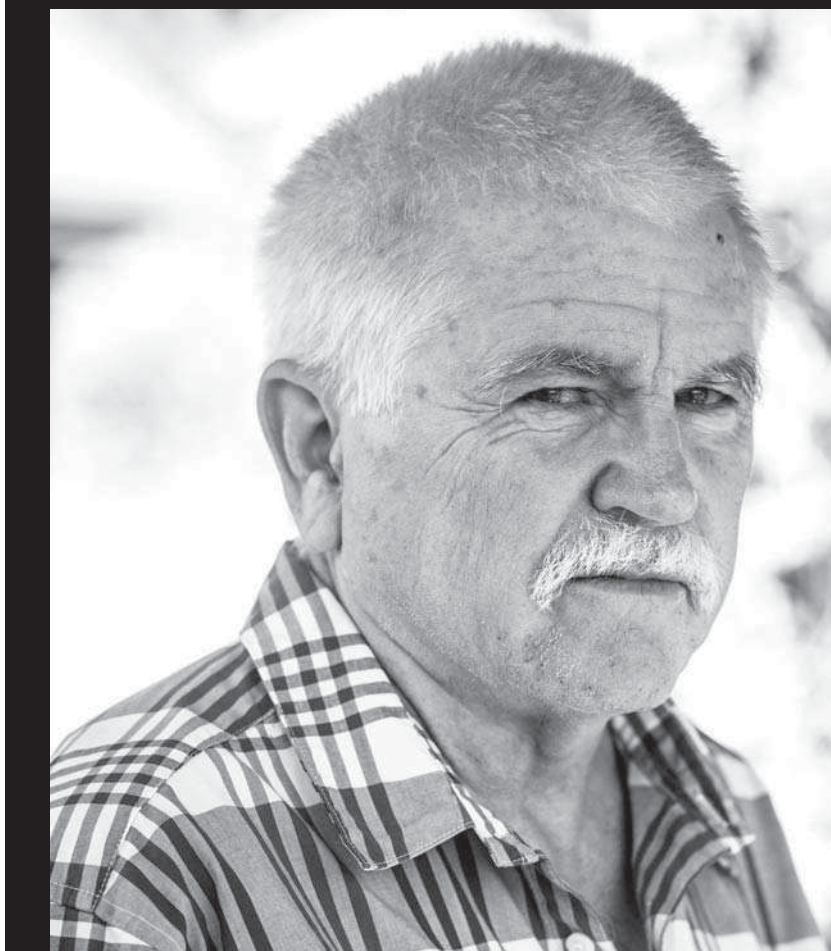
마이크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단연 탁월했던 마르크스주의적 상상력을 잃었다. 호기심이 끊임 없이 샘솟던 인물인 마이크는 차량 폭탄 테러, 소행성 충돌, 슬럼,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등 그야말로 온갖 주제를 다루면서 학문적 집중력과 탁월한 문체를 발휘했다.

마이크가 2020년에 존 위너와 공저한 책 《이 밤을 불사르자》는 위의 주제들 중 마지막 것을 다루는 동시에 마이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이크는 1946년 캘리포니아 남부의 노동계급 가정에서 태어났고, 16살에 학교를 떠나 당시의 시민평등권 운동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민주학생연합 SDS 조직자로서 독일계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허버트 마르크제에게 편지를 썼던 일화를 내게 들려준 적이 있다. 당시 마르크제도 마이크처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었다. 마이크와 그의 동지들은 마르크제 집에 초대받아 맥주를 상자째로 마시면서 그와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마이크는 트럭 운전수로 일했고 곧 사회주의 활동가가 됐다. 처음에는 공산당 LA지부에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주한 뒤에는 국제마르크스주의그룹에서 활동했다. 격월간지 《뉴 레프트 리뷰》가 마이크의 지적 재능을 발견하고는 런던으로 불러들였다. 내가 마이크를 처음 만난 곳도 여기였다.

마이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된 자신의 노동계급 배경을 한 번도 잊지 않았고, 1980년대 말에 그리로 돌아갔다. 이후 마이크는 학계에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처음에 마이크는 “일주일 동안은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가, 트럭 먼지 날리며 대학에 도착해서 강의 하고서는 다시 트럭에 몸을 싣고 돌아가곤 했다.”

마이크는 놀라운 저작들을 계속해서 써냈다. 《수정의 도시》(1990)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가 지리적으로 계급에 따라 양극화돼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들춰냈다. 책 출간 2년 후, 빈민들의 대규모 반란(1992년 LA 흑인 항쟁을 말함 —역자)이 터져나와 마이크의 진단이 정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1946~2022) 조사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난 걸출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확했음을 입증했다.

후속작 《공포의 생태학》(1998)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조사했다. 그 책의 백미는 ‘말리부 해변이 불타도록 내버려두는 이유’라는 제목의 챕터로, 이윤을 좇은 과잉 개발이 지역 생태계와 충돌한 탓임을 폭로했다.

이런 성취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느라 작품은 2001년에 출간된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국역: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이다. 《뉴 레프트 리뷰》의 당시

편집자 페리 앤더슨이 이 책을 마이크의 걸작으로 꼽은 것은 옳았다. 이 책에서 마이크는 19세기 인도·중국·브라질의 자유주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엘니뇨 기후 주기와 맞물려 파괴적 기근을 낳았음을 설명한다.

이 책은 풍부하고 매혹적일 뿐 아니라, 그 정치적 메시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던]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의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함을 마이크 자신이 분명하게 밝혔다. “이 책의 과제는, ‘식민지 백성’들을 아사로 내몰았던 제국 정책의 상당 부분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폭탄

을 1만 8000피트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자연계의 물리적 변동과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은 마이크의 후반기 글들의 핵심 주제에 속했다. 2005년작 《문 앞까지 온 괴물》[국역: 《조류독감—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에서는 2002~2004년 사스 팬데믹을 살펴보며 훨씬 더 거대한 생물학적 재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농·축산업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예측이 (그의 다른 많은 예측들처럼) 현실이 됐을 때, 나는 “전염병의 해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행운을 누렸다. 이 뉴스레터는 마이크가 날마다 관련 뉴스와 자신의 논평을 편집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첫 해 동안 발간됐다.

마이크는 엄청나게 박식하고 지적으로 용감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혁신적인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했다. 최근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도 그는 개혁주의 좌파에 대한 날 선 비판을 내려놓지 않았다. “[미국] 공화당은 항의 운동과 선거 정치를 연결시키는 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저항도 거리 투쟁 운동을 거느리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당의 안과 밖을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키고도 있는 반면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폄하하지만, 마이크에게 헌정된 논문집의 제목 “재앙과 혁명의 길목에서”야말로 그의 진정한 전망을 제대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이크는 심오하면서도 명쾌한 통찰로 “대재앙 자본주의”(마이크의 표현)가 낳고 있는 참사들을 분석했다. 그러나 그것이 혁명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고 봤다.

넬리 회자되고 있는 마이크의 말은 그의 생을 잘 요약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에너지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 복종에 대한 반발, 남이 정한 결론에 대한 거부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도리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방어하라. 투쟁하라.”

마이크의 파트너 알레산드라 모테주마와 그의 자녀, 친구, 동지들께 사랑과 애도를 보낸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829호 / 번역 김중환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5

이탈리아형제당은 단순 우파 아닌 파시즘 정당

사이먼 바스케티

이나치오 베니토 라 루사는 전직 국방장관으로, 그의 아버지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의 간부였다. 라 루사는 조르자 멜로니와 함께 이탈리아형제당을 창당했다.

라 루사는 올 10월에 이탈리아 상원의장으로 선출됐다.

라 루사는 자기 집에 전시된 수많은 파시스트 유물들을 자랑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의 상징도 있는데, 그건 무솔리니 동상 발밑에 깔아 뒀다.”

라 루사는 이탈리아사회운동당(MSI) 청년 지부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은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1946년에 창당한 당이다.

멜로니는 “이탈리아형제당의 DNA에는 파시즘·인종차별·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움”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나치오의 남동생이자 이탈리아형제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로마노 라 루사가 지난 달 한 장례식장에서 팔을 곧게 뻗은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 이탈리아형제당은 “로마노는 다른 사람들처럼 팔을 내리라고 부탁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걷는 자들이 ‘나는 오리가 아니요’ 하고 꺾꺾댄다 해서 좌파가 그들을 토끼라고 불러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창당됐다. 이 당을 창당한 파시스트들은 1943년 연합군이 시칠리아를 침공한 후 이탈리아 북부에 세워진 나치 괴뢰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자들이었다.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의 약자인 MSI는 “무솔리니여, 영원불멸하소서(Mussolini, sei immortale)”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기도 하다. 이 당의 추종자들은 전임 파시스트 정권이 충분

히 급진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파시즘으로 회귀하기를 바랐다.

이탈리아를 파시즘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연합군이 아니라 나폴리·로마·토리노·밀라노 등 도시들에서 파시즘 지배에 맞서 벌어진 대중 파업과 무장 항쟁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들의 비겁함과 미국의 간섭 때문에 전후 이탈리아에는 좌파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 구조가 세워졌다.

국가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할 당시 지배계급 기구들은 히틀러의 독일보다 뿌리가 훨씬 취약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지배와 기존 국가의 무장력을 훨씬 수월하게 결합시킬 수 있었다. 무솔리니에게는 돌격대가 필요 없었다. 무솔리니는 경찰을 이용했다.

이러한 국가 기구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비교적 온존했다. 이탈리아 정치에서는 탈(脫)나치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업주들에게 위협이었던 것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좌파였기 때문이다.

1948년 시행된 이탈리아 헌법은 “해산된 파시스트당을 어떤 형태로든” 재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은 연립정부에서 배제됐다. 또한 그래서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은 창당 직후부터 완곡 어법을 썼다.

하지만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이 1960년에 정부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것은 전국적 시위·파업·소요 덕이었다. 국가 기구에 속한 자들 및 파시스트들의 일부는 테러리즘에 기댔지만 1970년대에 파시스트들은 대체로 주변화됐다.

정치의 틀 안에 파시스트 사상을 남겨 놓기 위한 기념일과 추모 행사들을 둘러싸고 제한적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파시스트들은 정부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1994~2011년 사이 집권했던 네 번의

▶ 15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이탈리아형제당

멜로니는
“이탈리아형제당의 DNA에는
파시즘·인종차별·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움”은 없다고
말했지만 …

▶ 15면에서 이어짐

정부들(안이하게도 “중도우파” 정부로 분류됐다)이 파시스트에게 재기할 기회를 열어 줬다.

1990년대 초 일련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냉전기에 자리잡은 이탈리아의 지배적인 정치 구조가 무너졌다.

구 우파와 그들의 적수인 사회민주주의 세력 모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탈리아전진당이 부상했다. 언론 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 당을 이끌었다. 베를루스코니의 반공주의는 파시스트가 부활할 토양을 제공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역사에서 한 구실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공공연히 옹호하기 시작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었고 “이탈리아를 위해 좋은 일을” 했던 “온화한 독재자”였으며 무솔리니가 세운 수용소들은 모두 “휴양 시설”이었다고 했다.

재생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부흥은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에 이어 북부동맹도 파시스트들이 재기할 토양을 닦는 데 합류했다. 북부동맹은 비교적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 정당이었다.

북부동맹은 인종차별적 우파 정당이었지만 파시스트 전통에서 비롯한 당은 아니었다.

베를루스코니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국민연합은 파시스트 전통에서 비롯했다. 국민연합은 이탈리아형제당의 전신이고, 이탈리아사회운동당을 계승한 당이었다. 국민연합의 파시스트들은 무솔리니와의 연결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포스트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무솔리니와 거리를 뒀다.

지금은 다시 명칭이 바뀌기도 했지만 바로 이들 세 집단[이탈리아전진당, 북부동맹, 파시스트]이 현재 이탈리아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우경화한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위기에 형편없이 대응하면서 노동계급 지지층과 유리됐다. 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계



사진 출처 이탈리아 정부

파시스트 멜로니의 총리 취임이 곧 파시즘의 승리는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급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베를루스코니가 파시스트들에게 문을 따 줬다면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줬다. 살비니는 자신이 속한 북부동맹을 장악했다.

살비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주의를 버리고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받아 들였으며, 극우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살비니는 “이탈리아 우선”이라는 구호를 채택했는데, 이 구호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파시스트 정당 ‘카사 파운드’가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살비니는 지난 2년을 은행가 [출신인 드라기] 정부를 지지하며 허비했다. 이제 사람들은 진짜배기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멜로니는 자신이 “유일한 야당”이었고 “진짜 이탈리아인”들과 교감한다고 자처할 수 있었다.

파시스트

멜로니는 “내가 파시스트였다면 파시스트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는 파시스트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파시스트적이라고 주장한다. 의도적인 반(反)이성적 정치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이른바 “유대-기독교”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임신 중지권을 제약하고자 한다. 멜로니는 이민자유입을 침공으로 간주하고, 유엔에 의한 “대교제 음모”의 일부라고 본다.

멜로니는 “좌파의 세속주의와 급진 이슬람이 우리의 뿌리를 위협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멜로니는 우파 정당들이 “성소수자들의 로비”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들이 파시스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 중 작은 사례 하나는 이탈리아 대통령직 문제다.

이탈리아형제당은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한다(현재는 총리가 지명하

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의회 내 뒷거래에 의해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되리라는 것이다.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위장술이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면 정치를 이른바 거리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은 의회를 나쁜 방식으로 우회해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한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는 새 정부가 이루고 싶어하는 핵심 사안이긴 하다.

이탈리아가 부채 문제에 대응하려면 유럽연합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 서로 싸우는 극우 집단들 중 누가 우크라이나의 편이고 누가 유럽연합에 가장 덜 우호적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가짜 쟁투는 정부 직책을 둘러싼 갈등의 일환이지, 원칙을 둘러싼 싸움 같은 게 아니다. 멜로니가 유럽연합의 자금을 원하고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이 꼭 그가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다.

무솔리니는 1920년대에 이탈리아 좌파를 분쇄할 때 과격하고 파괴적인 자였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미국 금융가의 사랑을 받았고, 무솔리니 역시 외국계 자금과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과소평가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를 그저 그런 인종차별적 깡패라고만 여긴다. 그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고 개종 나온 (체제에 순응적인) 자들에게 규율을 부과하면 쉽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과소평가가 끔찍하게 위험한 것임은 과거에 밝혀진 바 있다. 그

리고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이 자본에게 대우받을 만하게 보이려고 선거적 기반을 구축하려 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그에 발맞춰 거리의 군대를 건설하지는 못하고 있다.

파시스트들이 온전히 승리하려면 서로 연결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첫째, 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적극적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운동이 있어야만 파시스트들은 다른 사회 세력, 특히 조직 노동계급에 맞설 수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무솔리니의 당이 무장 집단을 만들고, 히틀러가 1930년에 10만 명 규모의 무장력을 갖췄던 것이다.

둘째, 지배계급과 국가기구의 결정적 일부가 파시스트들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 무솔리니와 히틀러 모두 대중운동이나 지배계급 지지 확보 전략이냐 사이에서 긴장을 겪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전략은 서로 조응했다.

파시즘은 선거를 이용해 거리의 파시즘이 성장할 틈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파시스트 깡패들이 이탈리아의 주요 노총 본부 건물을 습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유혈 난자한 억압적 우파 정부가 노골적인 파시즘으로 진화했었다.

‘로마 진군’과 무솔리니의 권력 장악 사이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걸렸다. 독일에서 히틀러는 쿠데타 실패 후 권좌에 오르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따라서 파시스트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리 취임이 곧 파시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일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828호 / 번역 김준호



이란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 파업하다

닉 클라크

이란 국가가 인명 살상까지 서슴지 않으며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가운데, 이란의 교사들이 여기에 맞서 이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쿠르드족 거주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지만 수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시위 진압 부대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인 항의 행동이었다.

반정부 운동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3~24일에 벌어진 이 파업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최근의 징후다. 그 전에는 이란 남부의 정유소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계속되는 듯하다. 10월 20일 아바단 정유소 노동자들은 22일에 파업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조차 운전사, 철강 노동자, 타이어 제조 노동자들 등 다른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현재 대체로 거리 시위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대중 운동의 일부다. 이 운동은 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혹독한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수십 명의 초등학교생까지 죽고 다치고 투옥됐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여전히 거리로 나오고 있다. 시위대의 대



10월 25일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란 마슈하드시(市)의 소방관들

다수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대학 캠퍼스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행동을 이끌고 있다.

10월 22일 이란 전역에서 최소 30개의 도시, 20여 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많은 시위대가 최루 가스를 뒤집어 쓰고 총탄을 피해야 했다. 시위대와 시위 진압 부대의 밤샘 전투가 이어졌다.

데즈풀시(市)에서 대규모 시위를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시위는 총성이 거둬 울리는데도 계속됐다고 한다. 마하바드와 나이사르시(市)의 시위대는 타이어를 태워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대학에서 시위는 남녀를 분리하는 성차별적인 교

칙에 맞선 저항으로 번졌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대학교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성별 분리 규칙을 어기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끈질긴 시위에도 현재 이란 정부는 물러설 기미가 거의 없다. 오히려 무자비하게 운동을 찍어 누르려 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시위 참가자, 활동가, 파업 참가자들이 체포됐다. 많은 수는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

에빈 교도소에 수감된 정치수들의 가족은 10월 23일 교도소 앞에서 정치수들이 무사한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달 초 그곳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고 총성이 들렸

는데도,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

10월 21일 고위 이란 성직자이자 이란헌법수호위원회(정부를 감독한다) 위원인 아흐마드 하타미는 판사들에게 체포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날 판사들은 체포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밤낮으로 수십 건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행동이 확대되면, 운동이 탄압을 버텨 내고 상황을 정부에 불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호 / 번역 이원웅



온라인 토론회

미국 중간선거 - 트럼프의 귀환?

11월 10일(목) 오후 8시 |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기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석 과반을 수성하려는 바이든의 민주당과 제패를 노리는 공화당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요?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귀환에 힘을 줄까요? 미국 정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중간선거 결과 발표 직후 토론회를 보려 합니다.



참가신청 bit.ly/1110-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